

박재만 '지방의원 후원회 제한' 헌법소원

(도의회 의원)

박 의원 외 6인 정치자금법 제6호에 대해... 국회의원과 정치활동 차이 없는데 허용불가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박재만 도의원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군산 1) 외 6명의 시·도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6조 이하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자발적으

로 후원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1965년 정치자금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규제'가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상당부분 발달했다"면서 "나이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진 바, 정치자금 양성화 및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시·도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정치활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도의회 환복위 "육시 불매운동 동참"

"전북지역 '육시 집중 불매운동'을 선언한 사회단체의 제안과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책임 앞에서 너무나도 절멸피한 육시와 가슴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복위는 "현재까지 도내 가슴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43명에 사망자는 2명"이라면서 "도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위원장은 "앞으로 도는 공공기관과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육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생명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화학물질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 기업들의 제품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인사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여야 지도부 盧추도식 참석... 국민의당만 곤욕

안철수 대표 등 봉하마을 도착하자 일부 참석자들 욕설 퍼부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여야 지도부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공식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추도식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렸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 주요 정당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 금강산 관광을 이

행한 대통령이 중단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립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금 역사를 돌이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상임고문인 김원기 전 의장은 추도사에서 "노무현이 피운 꽃은 김대중이 뿌린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무현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은 김대중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노무현을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통으로 같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는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건넨한 현황 보고

만 한 뒤 무대에서 내려갔다. 추도식 후 여야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후 일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무소속 이해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정청래 더민주 의원, 김경수·김부겸·손혜원·표창원 더민주 당선인에게 환호가 집중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해찬 복당" "정청래 파이팅"을 외쳤다. 반면 국민의당 인사들에게는 환영 대신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딴 살림'을 차렸다는 데 대한 분노였다. 이날 안철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봉하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나서 욕설을 퍼부었다. 추도식을 마친 후에도 안 대표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동해야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도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도 부족할 판에 여전히 정치권은 오만과 불신, 파벌과 기득권, 패권주의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며 "이번 추도식을 통해 국민께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라는 명령과 함께 계파와 패권정치에 엄중한 경고를 주셨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오늘의 추도식을 계기로 국민만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정치라는 노무현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한달만에 정당지지도 1위

더불어민주당이 4주만에 새누리당을 제치고 정당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로 내려앉았다.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16~20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60%)와 유선전화(40%) 병행 임의결기(RDD) 방법으로 조사한결과(응답률 5.7%), 더민주는 전주 대비 1.8%p오른 29.5%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1.4%p떨어진 28.4%로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전주 대비 0.3%p떨어진 19.8%로 3주 연속 하락하며 총선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19주 연속 1위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전주 대비 1.5%p하락한 24.2%를 기록했으나 선두를 지켰고, 안철수 대표는 지난주보다 0.4%p오른 17.9%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3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9.9%), 4위는 박원순 서울시장(7.6%) 순이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6.5%로 5위,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4.6%로 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주 기자

"대통령 거부권행사 시 더민주는 그것 거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대통령이 (개정안)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과 달리 이 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런 대통령이 국회 틀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다.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제든 일하는 국회를 비판하다가 일하겠다는 행정이 마비된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나"며 "국회가 열린 행정이 마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으로 나라를 이끌어왔구나 생각했다.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김경수 "친노, 이제 계파로는 의미 없어"

친노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인은 23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고 좋아한다는 의미에서의 친노라면 존재하지만 정치권의 계파로서의 친노는 별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노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마지막 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어디 분석한 거를 보니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친노·비노를 분류할 때 기사마다 어떤 때는 친노로 분류했다가 어떤 때는 비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몇십명에 달했다"며 "정치권에서의 친노 논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친노 프레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세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흥미 위주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친노패권이나 친노 계파 논란 부분은 20대 총선을 계기로 정리돼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20대 총선 이후에 당선자 워크숍이나 당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더라도 계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제 와서 다시 또 계파 논란이나 친노패권 논란이 우리 당내에서 불거지면 더 이상 우리 당이 일어서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도 "친노야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당 내에서 계파 문제로 접근했던 것은 20대 총선 이전의 문제"라며 "지금도 친노 비노 반노로 구분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친박계 영입에 반기문이 덜렁 올라타겠나" 새누리당, 의원회관 사무실도 계파별로

김성태 의원 "총선 참패 위기 극복·박 대통령 지지도 회복해야"

비박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친박계의 반기문 UN사무총장 대권주자 영입설에 대해,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흔히 말하는 특계 계파 세력이 추대 응립한다고 새누리당에 덜렁 올라타겠나. 헛지않을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녁'에 출연, "당내 일각에서 반 사무총장만 응립하면 내년 대선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새누리당의 더 큰 위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전체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번 4·13총선 참패에 대한 자성과 반성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국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받고 지지도가 회복돼야한다"며 "(그래야) 반기문 총장도 새누리당에 쉽게 흔히 말하는

근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며 "또 당청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도 지금 방식으로 안 되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다만 지금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현실이 된 마당에 대통령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지는 여의도 정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주 기자

손혜원, "국민의당 그냥 조용히 계시는 편이 나았을 것"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인(서울 마포 을)이 23일 국민의당을 겨냥해 "어차피 봉하에 갈 거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홍보위원장은 손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언론에 실린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당선인은 이어 "세월이 가도 줄어들기는커녕 더 강해져만 가는 친노세력이 부럽기는 한데 그 중심에 문제인이 버티고 있는 것이 영 마땅치 않다는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네요"라고 꼬집었다. /이성주 기자

6·10총선 서청원 등 친박계, 7총선 김무성 등 비박계 포진

새누리당 친박·비박간 신경전이 높아지는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사무실도 계파별로 서로 층을 달리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뉴시스가 이날 국회 사무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친박계는 의원회관의 6층과 10층, 비박계는 7층에 대거 포진하는 식으로 122명의 사무실 배정을 완료했다. 친박계 맞춤형 서청원 의원은 19대 국회의 628호에서 601호로 방을 옮겼다. 601호는 정면이 국회 본수대와 도서관이 바로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다. 기존에 쓰던 628호는 같은 친박계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원내대변인에게 넘겼다. 604호에는 최근 비박계 위주 비대위 인선에 강력 반발, 정국위를 무산시킨 친박계 박덕흠 의원이 자리를 잡았다. 박 의원과 함께 친박계 입장을 대변하며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항의한 김선종 당선인은 626호를 사용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적을 바꿔 친박계로 새롭게 분류되는 조정래 의원은 636호다. 648호는 '신박'으로 급부상한 원우철 원내대표의 방이 됐다. 또 10층에도 여러 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이자 5선에 성공한 친박계 핵심 정갑윤 의원은 1006호를 사용한다. 4·13 총선에서 대표적 '친박'으로 통했던 곡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014호,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015호,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016호로 나란히 자리잡았다. 10층에는 19대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로 친박계를 대리했던 조원진 의원(1018호)이

지난 국회 때와 같이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6, 10층과 달리 7층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비박계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706호를 사용하는 김무성 전 대표의 양 옆에는 측근인 이근현(704호), 강석호(707호) 의원이 자리잡았다. 여권의 핵심인 서울 관악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무성계 오신환 의원은 738호를 사용한다. 지난해 2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친박 마케팅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모든 잘못의 중심에 최경환 의원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비박계 이종구 당선인은 713호를 배정받았다. 또 유승민 작계로 분류되는 이해훈 당선인(914호)은 무소속 유승민 의원(916호)의 바로 옆 방을 차지하게 됐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 없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나란히 946호, 944호를 사용한다. 유력 당권주자들이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것도 흥미롭다. 친박계 이주영(819호) 홍문중(848호) 의원과 비박계 정병국(801호) 의원이 한 층에서 4년을 함께 보내게 됐다. 정 의원의 801호는 과거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사용하던 곳이다. 828호를 사용했던 비박계 나경원 의원은 범친박계 이진제 의원이 사용하던 450호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던 545호는 재선에 성공한 이완영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사용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638호는 김승호 비례대표 당선인이 배정 받았다. /이성주 기자